



광남일보



불거리·먹거리 풍상·방문객들 '들썩'
'군본로 글로벌 토요일시장' 개장...상인들 화석



광양 농특산품, 중국시장 진출 '속도'
사면 투자무역상담회사 판로확대 발판 마련



해남, 공동육아방 '만족도 최고'
4곳 운영...청결·체결·서비스 긍정 평가



AI페퍼스, 전체 2순위 김서영 지명
2025-2026 신인 드래프트서 1라운드 2순위

광주시-민주 “원팀으로 국가시센터 유치”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국가AI컴퓨팅 센터 유치 등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역 최대 현안인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설치 등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박관택 국회의원, 임백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및 시·구의원, 조병남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이날 주요 안건으로 광주 지역 공약 국정과제 반영 결과, 재정 현황을 보고했다.

또한 주요 현안으로 2026년 국비 확보, 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 광주 선정 지원, 호우피해 복구 및 침수예방 대책, 주민자치회 운영 법적근거 마련,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설치 추진, 랜드마크형 관광자원 복합쇼핑몰, SRP제조시설 사용자 조정 중



7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자치분권정책협의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등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치분권정책협의회서 국정과제 반영 성과 등 공유 강기정 시장, 복합쇼핑몰·내년도 국비 등 지원 요청

제 등을 보고하고 광주 국회의원과 민주당 광주시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강기정 시장은 “최근 광주시는 6000억 원 규모의 AI 2단계 예타 면제 등 큰 성과를 거뒀고, 내년 정부 예산안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조7000억원이 반영됐다”며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은 광주시가 원팀이 돼 함께했기 때문이다. 이제 곧 시작될 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에도 모두가 함께 혼신의 힘을 모아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2024년 협약안건이었던 복합쇼핑몰 관련 공개토론회와 광주

민·군 통합공향 이전 추진결과를 보고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각자 자리는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광주시민 삶의 행복과 광주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이제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7대 공약 15개 추진과제가 잘 안착되고 우리의 바람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노쇼 사기’에 우는 소상공인

광주전남 1~7월 322건·55억 피해·법적보호 '사각지대'

광주·전남지역에서 허위 전화주문 사기(노쇼 사기)로 인한 피해가 수십억원에 이르지만 검거는 10건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자들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워 입법 보완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노쇼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광주·전남지역에서 총 322건(광주 190건·전남 13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은 55억여원(광주 36억9690만원·전남 18억여원)에 이른다. 하지만 검거 건수는 59건(광주 56건·전남 3건)으로 검거율은 18% 정도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노쇼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가 현행법상 지급정지 조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급정지는 사기 등으로 송금된 돈을

피해자가 요청하면 해당 계좌를 일시적으로 동결해 지급 인출을 막고 피해금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보호 제도다. 지난해 8월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지만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피해에 국한해 물품 대금 사기인 '노쇼 사기' 피해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해당 법령 2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나 '제외의 공금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법적 구제는 쉽지 않고,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크다.

이에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쇼 사기는 가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을 더욱 힘들게 하는 파렴치한 범죄다”며 “통신사기피해 환급법과 관련해 유언히 적용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근절할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이재명정부, 첫 조직 개편안 확정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소·수사 각 담당...중수청, 행안부 산하
기재부→재경부 전환, 예산·재정 떼어내 기획예산처 설치도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재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하게 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검찰청은 1948년 설치 이후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개편안은 권력기관 개혁과 검찰권 남용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기존처럼 담당하되 예산·재정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 신설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했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이 흡수된다.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며,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맡는다. 금융위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 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기존 금융감독원

의 소비자보호처는 분리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되며, 두 기관 모두 민간기구에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된다.

미디어·통신 정책 통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 관련 기능도 이관돼 정책 혼선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하기 위한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되는 반면, 기존의 사회부총리 제도는 폐지된다.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를 위해 국가데이터처(통계청 승격), 지식재산처(특허청 승격)가 국무총리속속으로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전담 차관, 고용노동부에는 산업안전보건본부(차관급)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과 기능이 확대된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게 됐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300여명 구금

대통령실 “석방 교섭 마무리...전세기 출발 예정”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 걱정이 많으셨다.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이민 당국은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 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구금 인원 중 LG에너지솔루션 소속은 47명(한국 국적 46명·인도네시아 국적 1명)이고, HL-GA 배터리회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은

250여명으로 파악됐다.

강 실장은 “다만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리”는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2025.08.30.—10.31.
목포시, 진도군, 해남군 등 전남 일원

2025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Jeonnam International Summit Biennale 2025

문명의 이웃들
somewhere over the yellow sea